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3-5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1월 일

제출자 : 강 서 구 청 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필수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필수업무를 대면업무, 필수업종 등으로 한정된 문구를 수정함으로써 다양한 재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(안 제1조, 제2조)

나.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률과의 용어 통일 및 띄어쓰기 수정(안 제2조, 제4조, 제5조)

다.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혹은 주기적으로 수립해야하는 기본계획은 적절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수립하는 지원계획으로 변경(안 제6조)

라. 관련법에 따라 본 조례의 위원회를 대신하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상의 ‘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’의 위원장을 호선에서 구청장으로 규정(부칙 제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3조, 제10조, 제1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2. 10. 19. ~ 11. 8.) 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- 2) 성별영향평가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대면업무”를 “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재난시”를 “재난 시”로, “필수업종”을 “필수업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필수업종”이란”을 ““필수업무”란”으로, “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”을 “필요한 업무로서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정하거나,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.

제3조 중 “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”를 “구청장 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업무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필수업종”을 “필수업무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기본계획수립 등)”을 “(지원계획수립 등)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본계획”을 “지원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필수업종”을 “필수업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본계획”을 “지원계획”으로 한다.

-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“필수업종”을 “필수업무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위원장 및”을 “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<u>채대면업무</u> 를 수행하는 <u>필수노동자</u> 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<u>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</u> <u>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</u> 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“필수노동자”란 <u>재난시</u>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<u>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</u> 을 말한다. 3. “필수업종”이란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<u>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</u> 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재난 시</u> ----- ----- ----- <u>필수업무</u> ----- -----. 3. “필수업무”란 ----- ----- ----- -- <u>필요한 업무로서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정하거나, 「필수업무 지정 및</u>

<p>4. “대면업무”란 <u>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생명·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.</u></p>	<p><u>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---.</u></p> <p><삭 제></p>
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<u>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</u>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<u>구청장</u>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적용대상)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, 지역공동체 유지, 구민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<u>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강서구”라 한다)</u>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적용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 <u>구청장 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업무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실태조사) ① <u>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, 필수노동자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서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 현황, 근무환경, 처우 등에 대한</u></p>	<p>제5조(실태조사) ① ----- <u>필수업무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6조(기본계획수립 등) ① 구청장은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(생략)

2. 필수업종 지정 및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

3. 4. (생략)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해 강서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지원계획수립 등)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필수업무 -----

3. 4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지원계획-----.

제8조(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등) ① -----.

1. ----- 필수업무 -----

2. · 3. (생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의2(정의) "필수업무"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(이하 "국가등"이라 한다)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시·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제11조(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